

지방소비세율 높였지만 세원 집중된 수도권만 유리

진정한 지방재정분권 길을 찾다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문 정부 재정분권 1단계 평가

지방소비세율 10% 포인트 상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지방이양 등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2019~2020)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지역의 재정이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소비세가 8조7187억원이 증가하지만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에 혜택이 돌아가고, 보전 조치 없는 균특회계의 지방 이양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더 빈곤하게 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제주 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재정분권 1단계를 실시하기 전인 2018년에 비해 오히려 정부 지원이 감소한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광역시 역시 현재의 구도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재정분권 1단계가 지난 2018년 10월 정부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서 제시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과는 어긋나게 추진됐으며 개선책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광주일보에는 9일 오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열린 ‘재정분권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 “세수의 수도권

세입 열악한 곳 계속 열악

재정 부익부 빈익빈 심화

지방양여소비세 신설 등 대책

국세·지방세 체제 전면 개편을

편중 심화=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재정분권 1단계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지방소비세의 정상화 논의에서 지자체가 배제됐다는 점을 들었다. 임 교수는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올려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하면서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두고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균특회계 중 3조 57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자체의 세수 증가 규모와 사업 이양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3년 한시 보전이 종료된 뒤 비수도권의 세입이 급감하는 문제를 감안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재정분권 방향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재정분권 없이는 불가능하며, 지금의 재정분권 1단계가 세입이 열악한 곳은 계속 열악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분권을 강화하면서 세수의 불균형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은 9일 오후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재정분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 상생기금 확대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광역균특회계 유지 검토 필요”=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재정분권은 지역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를 ▲정부 제공 공공서비스의 공평한 제공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및 지방공동화 현상 완화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 등으로 정의하며, 재정 배분의 균형을 언급했다. 국세와 지방

세의 비율에 집중하기보다 국가 재정을 지방에 균형 있게 넘겨주는 방안을 더 앞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상향했다. 하지만 이는 세원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기능, 즉 수요가 있는 곳에 재원이 분배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며 “현재 지방소비세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유리하고 재정력이 약한 지역이 불리하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은 “지방양여소비세나 공동세를 신설하는 등 국세 및 지방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현재의 균특회계 사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들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상구 전남도 예

산담당관은 “재정분권이 미칠 파장에 대해 정부부처 관계자들마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전남은 비롯한 각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도 없이 추진된 재정분권 1단계는 배분에 실패했으며,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기 다른 지방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해 지방의 입장에서 재정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균등 분배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민평련’ ‘더미래’ 몰려

운동권 출신 대부분 참여

당내 현안 등 영향력 주목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당내 모임 가운데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과 ‘더미래(더좋은미래)’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평련과 더미래에 참여한 대부분의 지역 의원들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태생), 운동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출신 의원들은 이 같은 당내 모임에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 이채를 띠었다.

9일 광주일보가 확인한 결과, 민평련에 참여한 광주지역 의원들은 송갑석, 조오섭, 이윤환, 윤영덕 의원 등이었고 전남에서는 신성훈, 김승남, 김원이, 주철현 의원 등 총 8명이었다. 특히, 주철현 의원은 공안 검사를 지낸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운동권 출신이 주를 이루는 민평련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미래에 참여한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송갑석, 조오섭, 이윤환, 윤영덕, 김승남, 신정호, 서동용, 김원이 의원 등 8명으로 민평련에 참여한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민평련과 더미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의원들 모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평련은 고(故)김근태 의원의 정신을 모태로 하는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더미래는 진보적 가치와 노선에 입각한 서민정치 실현을 내걸고 있다.

민평련은 43명, 더미래는 51명의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치적 결속력은 크게 강하지 않지만 당내 현안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실제로 더미래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선 대권 주자들의 전남대회 출마에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

평련은 그동안 당내 역학구도에서 서로 밀고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측면에서 두 모임에 공통 참여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 광주·전남 7명의 의원들은 앞으로 당내 및 지역 현안을 두고 상호 연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광주시 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선출이 경선을 통해 이뤄진다면 이들 의원들의 상호 연대 및 공조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운동권 출신 의원 특유의 결속이 정치적 기득권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적 관계자는 “다시 시작하는 호남 정치는 개인이나 그룹의 이해관계보다는 호남의 미래를 위한 결속이 우선돼야 한다”며 “운동권이나 관료 출신이니 할 것 없이 소통과 연대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키워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北 통신선 차단에 판문점 선언 비준 처리 목소리

윤건영 “北 누적된 불만 표출”

김홍걸 “풍선 그냥 놔두면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북한이 남북한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사실상 폐기하자 당측각속에서 추이를 주시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는 굶중이 대책인가?”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대통령 국정기평상황실장으로서 판문점 선언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태의 시선집중’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식은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최소한 안전판 기능인 군 통신선을 잘랐다는 부분은 대단히 아프다”며 “정상 간 합의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

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인 코로나19 사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협상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북한은 조치를 즉각 철폐,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북 전단 무단살포 등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한 김홍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에 불자를 보내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유일하게 풍선

으로 띄워 보내는 것만 손을 못 쓰고 있다”며 “그것을 그냥 놔두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폐기 선언에 대해선 “도움이 필요한데 상대가 자기네를 체면과 자존심을 세워 주면 태도를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더라도 버틴다고 하는 양면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처리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김여정 당 제1부장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고도 지시하자 즉각 법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언도 우리 측에서 나왔다”면서 “남북 정상 합의의 한 판문점 선언 특히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은 북한이었다”고 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특허정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